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2016년 10월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최진욱* · 박진아**

최근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접근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규제개혁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 볼 때 이 논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핵심 용어: 규제개혁, 규제완화, 경제성장, 고용창출, OECD 국가 패널분석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jinchoi@korea.ac.kr)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jina1023@korea.ac.kr)

*** 이 논문은 교신저자의 2014년 고려대학교 연구비(K1421161)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도 이미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섰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출생률 감소,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에 있다.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가운데 주목을 받는 접근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 시스템의 점검과 더불어 규제개혁이 필요한 산업분야와 영역을 찾아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이 투자 증진과 창업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제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North(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규제정책과 같은 제도와 제도를 관리하는 국가와 정부의 역량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Fukuyama, 2004; North, 1990).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감안할 때 규제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가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규제개혁의 변화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 혹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이동임·김영만, 2006; 이병기, 2008; Djankov et al., 2006; De Hann and Sturm, 2000; Feldmann, 2007; Feldman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여부와 그 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할 대상을 OECD 국가들로 한정하고, 개혁의 효과를 검증할 규제 부문을 노동 관련 규제와 전반적인 규제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II절에서는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그리고 규제개혁과 고용창출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III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며, IV절에서는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V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규제개혁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규제개혁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 외에도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 이유를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고자 함이다.

Wolf(199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반면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정부규제는 오히려 더 큰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고, 이때는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같은 대응이 필요

하다(최진욱, 2006). 따라서 규제라는 정책수단은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수준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맥락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대한 개입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제학적 시각으로 볼 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다. 시장의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 기술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적 관점에서는 규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이 같은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Lemieux, 2015).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우려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보다는 산업자본을 활용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고용보호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보안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핀테크(Fintech)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시각 등이 지나친 정부 개입과 통제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시장 상황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규제완화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정부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Djankov et al., 2006; De Hann and Sturm, 2000; 이병기, 2008; 김종호, 2008). Djankov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를 활용하여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경이 기업친화적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종호(2008)의 연구에서도 기업환경지수를 활용하여 창업비용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기업규제 수준, 경제자유 수준,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각각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를 통해 추정한 이병기(2008)의 연구에서도 경제자유도가 높아지고, 기업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증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자유가 보다 많이 주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다양한 규제완화의 모습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가격규제와 산업의 시장 진입, 퇴출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다(Winston, 1993).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은 경제적 자유에 관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Gwartney et al.(2015: 1)은 경제적 자유의 개념이 개인의 선택,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자발적 거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같은 경제적 자유, 개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Miller and Kim(2016: 21) 역시 국가의 활동이나 정부의 통제는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는 대체로 정부 개입의 최소화에서 오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투자와 생산에 필요한 노력 그리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De Hann and Sturm, 2000). 따라서 개인과 시장이 보다 많은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된다면 생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규제개혁과 고용창출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는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규제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규제로 인한 고용효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경제적 규제에 한정해서 볼 때 예컨대 진입규제의 경우 신규 창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용에 대한 규제의 비효율성 이외에도 진입통제와 같은 규제는 정치인과 관료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유발할 수 있으며(Shleifer and Vishny, 1994),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는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규제로 인한 역효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규제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대될수록 시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국가의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경제적 규제완화가 특정 분야의 반독점규제나 사회적 규제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Winston, 1993),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고용창출에 있어 경제적 규제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보호하고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는 피고용인들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피고용인 개인에

계는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추가 고용의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Scarpetta, 1996; Chung, 2005). 결과적으로 고용보호에 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져 고용창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류기락, 2012).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는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명확하게 정의되기 쉽지 않다(Esping-Andersen and Regini,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규제개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어 왔다. 먼저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연구에서는 규제완화가 전반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이동임·김영만, 2006; Feldmann, 2007; 2008).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자유 수준 향상이 여성과 청년실업이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eldmann, 2007; 2008). 노동규제의 고용창출에 관한 여러 연구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이 높아지게 되면 실업 감소, 즉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ernal-Verdugo et al., 2012).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투자가 유도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된다면 규제개혁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규제개혁은 단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규제완화(deregulation)의 개념은 주로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의미로 쓰여 왔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이면에는 단순히 정부역할을 축소하려는 이념적·정파적인 기대보다는 다분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잡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Joskow and Noll, 1994: 372).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규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결과를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I. 연구설계

1. 분석모형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Y_{it} = \alpha + \sum_{j=1}^n \beta_j X_{j, it-1} + \sum_{k=1}^m \beta_k Z_{k, it-1} + \mu_{it-1}$$

i 는 i 국의 t 시점에서 경제성장률 혹은 고용률을 의미한다. i 는 OECD 국가를 의미하고, t 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1기의 시차($t-1$)를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X 는 규제의 수준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규제의 수준은 국가별 전체규제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Z 는 종속변수(경제성장률,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controlling variables)를 나타낸다. 경제성장률 분석에는 국가의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규모, 1인당 GDP, 고용률, 중등교육기관의 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한다.¹⁾ 고용률 분석에는 국가의 경제성장률, 인구 규모, 인플레이션, 조세격차, 무역개방도 변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μ 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모형을 토대로 OECD 국가의 14개년도 자료를 패널데이터(panel data)로 구축하였고, 실증분석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²⁾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1) OECD 가입국 중 칠레의 경우 정부지출 자료를 획득할 수 없어 경제성장 분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2)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수행하면서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분석결과를 추정하였으나, 하우스만 검정결과 본 연구에 제시된 대부분의 실증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OECD 국가 패널 데이터의 경우 패널 개체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OECD 국가 그 자체이므로 오차항 ui 를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민인식·최필선(2012: 175)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분석결과에는 하우스만 검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을 선택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2. 변수의 출처와 조작화

(1) 종속변수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연도별 경제성장률로써 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통계는 15세~64세에 해당되는 전체 인구 가운데 고용상태의 인구 비율로 산출되었다.

(2) 독립변수

실증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규제의 수준이다. 규제개혁 수준은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에서 해마다 측정하여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에 포함된 규제지수를 활용하였다. 세계경제자유지수는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을 통해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은 정부규모(size of government), 사법체계와 재산권(legal structure and security of property rights), 금융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sound money), 국제무역자유(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 전체규제수준(regulation)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섯 개 항목은 복수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Gwartney et al., 2015: 4).

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규제는 다시 금융시장규제(credit market regulation), 노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기업규제(business regulation)라는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시장규제는 민간은행의 예금수탁 비율(ownership of banks), 민간대출 대비 정부대출의 비율(전체 신용에서 차지하는 민간 신용 비율) (private-sector credit), 이자율 통제(interest rate control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노동시장규제는 고용에 대한 규제(hiring market regulations), 고용과 해고 규제(hiring and firing regulations), 노사임금협상의 정부규제(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노동시간규제(hours regulations), 해고비용(mandated cost of worker dismissal), 징병제도(conscription)의 5개 요소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한 행정순응 부담(administrative requirements), 생산품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과 의무(bureaucracy costs), 창업비용(starting a business), 기업 활동을 위한 뇌물(extra payments/bribes/favoritism), 면허관련 규제(licensing restrictions), 세금순응 비용(cost

of tax compli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분석에는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전체규제수준 지수를 활용한다. 노동시장규제의 경우 세부요인에 포함된 징병제도는 그 성격상 규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징병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항목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규제수준(regulation)은 세 가지 규제의 평균값을 통해 산출하였다. 각 항목과 전체규제수준은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고,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인 규제의 효과를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를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우선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Barro(1996), Djanjov et al.(2006), 김종호(2008)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지출, 1인당 GDP, 중등교육기관 등록률 등과 같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먼저 GDP 대비 정부지출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Jalilian et al., 2007), 정부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은 곧 경제활동에 정부의 개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의 분야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Djankov et al.(2006), 김종호(2008) 등의 연구에서는 GDP 대비 정부지출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OECD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국가의 초기 발전 수준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의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적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성장을 증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Barro(1996)의 모형과 이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후속 연구들의 경우에도 초기 1인당 GDP 수준으로 측정된 국가의 초기 경제발전수준이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모형과 달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국가의 초기 1인

당 GDP 수준이 아닌 2000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의 1인당 GDP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인당 GDP 자료는 세계은행의 1인당 GDP(current USD)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인당 GDP 액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기관 등록률은 Barro(1996)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1인당 GDP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률은 초기 인적 자본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Barro, 1996). 인적 자본의 축적이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Romer(1990)의 주장과 같이,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등교육기관 등록률 및 중등교육기관 등록률을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있으나(Barro, 1996; 김종호, 2008), 이 논문에서는 중등교육기관 등록자 수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전세계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초등교육기관 등록률에 국가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률 자료의 경우 결측치가 많아 분석에는 중등교육기관등록자 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등교육기관 등록자 수 변수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중등교육기관 등록자 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등록자 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곧 거시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Jalilian et al., 2007). 인플레이션 변수의 분석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연간 인플레이션 자료를 활용하였다.

거시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고용률이 낮아지며, 경기확장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윤규 외, 2012: 24). 그러나 경제성장과 고용률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실업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증한 오쿤의 법칙(Okun's law)과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언급 하듯이 고용 혹은 실업과 경제성장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Döpke, 2001). 이에 따라 고용률 또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고용률 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는 15세~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고용창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Feldmann(2009), 최종일 외(2008), Bernal-Verdugo et al.(2012) 등의 선행연구에 제시된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 조세격

차, 무역개방도와 같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기 순환의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들로,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변화율이 높은 경우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다(Avdagic, 2015).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격 신호와 상대가격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Feldmann, 2009). 경제성장률 변수와 인플레이션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는 노동시장 공급 규모의 대리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류기락, 2012).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장년층 등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공급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전체 인구 규모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변수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인구 자료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세격차(tax wedge)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Berger and Danninger, 2005; Bassanini and Duval, 2006; Avdagic, 2015). 이에 조세격차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조세격차 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는 노동 비용 대비 조세격차 비율을 활용하였다.

무역개방도의 경우 국가 경제의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써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Bernal-Verdugo et al., 201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역개방을 통해 해외 무역과 국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될수록 분배적 효율성이 증진되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타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던 국내 산업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Feldmann, 2007). 무역개방도 자료는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도지수 중 국제무역자유도(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를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무역개방도를 측정하며 무역 장벽, 암시장 환율, 자본과 인력 이동에 대한 통제 등의 세부 항목을 측정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제시된다.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무역개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 기술통계는 이어지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출처 및 기술통계〈삽입예정〉

IV. 실증분석

1.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효과

<표 2>는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규제수준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전체규제수준만을 고려한 단순회귀모형(1)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3)에서 동일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3)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전체규제수준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경우 다음 년도 경제성장률이 1.5%p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개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규제개혁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레이저재단이 측정한 전체규제수준은 2000년 6.26점에서 2013년에 6.86점으로 14년 동안 0.6점 상승했을 뿐이다. 이처럼 규제개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규제수준 점수의 변화를 감안할 때 실증분석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체규제수준 1단위(1점) 상승은 가히 혁명적인 규제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수치로 볼 수 있다.

규제 요인 이외에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1인당 GDP, 중등교육기관 등록 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만을 고려한 모형(2)와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3)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Barro(1991)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다. 정부지출 변수와 1인당 GDP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이 증대될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부정적 영향은 비록 정부지출이 민간부문의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이 민간의 저축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arro, 1991; 1996). 예컨대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대개의 경우 조세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국 조세확충은 국민들의 조세부담(tax burden)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저축할 여력이 줄고, 민간의 저축이 줄어들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GDP와 경제성장률에 관한 선행연구는 분석 기간 초기의 GDP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Barro, 1991; Djankov et al., 2006), 이 연구에서도 1기의 시차를 둔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대한 1인당 GDP의 부정적 효과는 OECD 국가들과 같이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잘 드러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등교육기관 등록자 수로 측정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 1996).

〈표 2〉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효과

변수	종속변수: 경제성장		
	(1)	(2)	(3)
전체규제수준	0.38* (0.23)		1.51*** (0.38)
인플레이션		-0.85*** (0.08)	-0.75*** (0.08)
정부지출		-0.17*** (0.04)	-0.10** (0.05)
1인당 GDP(ln)		-3.98*** (0.51)	-4.73*** (0.54)
고용률		0.001 (0.08)	-0.013 (0.075)
중등교육기관 등록 수(ln)		3.19** (1.57)	3.35** (1.55)
상수	-0.74 (1.69)	7.72 (24.49)	-0.10 (24.10)
<i>N</i>	476	418	418
R ² (Within)	0.013	0.341	0.368
R ² (Between)	0.000	0.000	0.000
R ² (Overall)	0.003	0.022	0.025

주: *p<0.1; **p<0.05; ***p<0.01

2. 규제개혁의 고용창출 효과

규제의 수준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모형(1)과 (3)의 결과는 전체규제수준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고,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될 때 고용이 증가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3)의 결과만 두고 볼 때 전체규제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고용률이 1.5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시장의 진출입, 신규창업과 투자에 관한 제약의 완화,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절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분석에서 사용한 전체규제수준 변수는 매우 포괄적인 규제의 범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규제 가운데 어떤 규제영역과 분야가 보다 큰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용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모형(2)와 (3) 모두에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인구 규모는 모형(2)에서만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세격차와 무역개방도 변수의 경우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격차는 일반적으로 기업, 즉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실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설명된다(Berger and Danninger, 2005; Bassanini and Duval, 2006; Avdagic, 2015). 이 연구의 분석 결과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세격차가 커질수록 전반적인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무역개방도 또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eldmann(2007)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져 자본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분배의 효율성을 높여 고용이 증가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단기적으로 산업화된 국가의 고비용 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당 분야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Feldmann, 2007).

〈표 3〉 규제개혁의 고용창출 효과

변수	종속변수: 고용창출		
	(1)	(2)	(3)
전체규제수준	2.05*** (0.26)		1.53*** (0.27)
경제성장률		0.30*** (0.03)	0.25*** (0.03)
인구(log)		-8.34** (3.88)	-3.89 (3.81)
인플레이션		-0.08 (0.06)	0.03 (0.06)
조세격차		-0.30*** (0.07)	-0.26*** (0.07)
무역개방도		-1.37*** (0.33)	-0.90*** (0.33)
상수	51.25*** (1.91)	225.31*** (65.33)	135.22** (64.71)
N	421	421	421
R ² (Within)	0.138	0.209	0.271
R ² (Between)	0.412	0.090	0.133
R ² (Overall)	0.322	0.075	0.129

주: *p<0.1; **p<0.05; ***p<0.01

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Fukuyama, 2004; North, 1990). 특히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변화에 있어 큰 축을 차지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이 논문의 결과는 경제성장을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탄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규제완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자료를 통한 이 연구의 분석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치출보다 오히려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경제의 회복과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규제개혁이 어려운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의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는 정부의 입장에서 확실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규제완화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형태의 효과를 시장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항상 혜택을 주는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완화 또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policy tool)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규제완화를 택할 경우 이 논문에서 분석한 긍정적인 효과와 이 논문에서 살펴보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호,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8, pp.27-46.
- 류기락,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OECD 주요 국가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보성, 1985-2010」, 『경제와사회』, 제96호, 2012, pp.252-287.
- 민인식·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12.
- 윤윤규·정진호·정원호·김성오, 『고용창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 이병기,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8, pp.3-25.
- 이동임·김영만,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정책」, 『경상논총』, 제37집, 2006, pp.17-39.
- 최종일·이영수·이중환,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규제와 경제적 성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제11권 제2호, 2008, pp.57-72.
-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2006, pp.3-25.
- 한국노동연구원, 「조세격차(Tax Wedge)의 국제비교」, 『노동리뷰』, 2006.11. p.74.
- Acemoglu, D., and Robinson, J.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Business. 2012.
- Avdagic, S. “Does Deregulation Work? Reassessing the Unemployment Effects of Employment Protectio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3(1), 2015, pp.6-26.
- Bassanini, A., and Duval, R. “The Determinants of Un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Reassessing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OECD Economic Studies* 42(1), 2006, pp.7-86.
- Barro, R. J.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1991, pp.407-443.
- Barro, R. J.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5698. 1996.
- Berger, H., and Danninger, S. “Labor and Product Market Deregulation: Partial, Sequential, or

- Simultaneous Reform?”, IMF Working Paper, 2005.
- Bernal-Verdugo, L. E., Furceri, D., and Guillaume, D.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Unemployment: New Empirical Evidence of Static and Dynamic Effect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4(2), 2012, pp.251-273.
- Chung, H. “Different Paths towards Flexibility, Deregulated Employment Protection or Temporary Employment?”, Paper Presented at the ESPAnet Conference, Making Social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University of Fribourg, Switzerland, September 22-24, 2005.
- De Haan, J., and Sturm, J. 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Economic Grow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2), 2000, pp.215-241.
- Djankov, S., McLiesh, C., and Ramalho, R. M.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s Letters* 92(3), 2006, pp.395-401.
- Döpke, J. “The ‘employment intensity’ of growth in Europe”, Kiel Working Paper No. 1021. Kieler Arbeitspapiere, 2001.
- Esping-Andersen, G., and Regini, M. (Eds.). *Why deregulate labour markets?*. OUP Oxford. 2000.
- Feldmann, H. “Economic Freedom and Unemployment around the World”, *Southern Economic Journal* 74(1), 2007, pp.158-176.
- Feldmann, H. “Business Regula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33(2), 2008, pp.201-235.
- Feldmann, H. “The Unemployment Effects of Labor Regulation around the World”,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7(1), 2009, pp.76-90.
- Fukuyama, F.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Gwartney, J., Lawson, R., and Hall, J.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 The Fraser Institute. 2015.
- Jalilian, H., Kirkpatrick, C., & Parker, D. “The impact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cross-country analysis”, *World Development*, 35(1), 2007,

pp.87-103.

Joskow, P. L. and Noll, R. G. "Economic Regulation", in Feldstein, M. (Ed.) *American Economic Policy in the 1980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367-440.

Lemieux, P. "A Slow-Motion Collapse", *Regulation* Winter, 2015, pp.12-15.

Miller, T. and Kim, A. B.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Promoting Economic Opportunity and Prosperity*. The Wall Street Journal. 2016.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Romer, P. M.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0, pp.S71-S102.

Scarpetta, S. "Assessing the Role of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al Settings on Unemployment: A Cross-country Study", *OECD Economic Studies* 26(1), 1996, pp.43-98.

Shleifer, A., and Vishny, R. W. "Politicians and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4), 1994, pp.995-1025.

Winston, C. "Economic Deregulation: Days of Reckoning for Microeconomis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3), 1993, pp.1263-1289.

Wolf, C.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Cambridge: MIT Press 1993. pp.17-33.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Jin-Wook Choi and Jina Bak

Reacting to the economic recession, governments are rethinking the role of regulatory reform as a vital strategy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create jobs. While many studies have explored the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t is still controversial as to what extent regulatory reform can play a role to regain economic vital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economic uncertainty. Utiliz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3, this paper analyzes whether chang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have led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Results of empirical tests demonstrate that deregulation-oriented regulatory reform has positive impacts on GDP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re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a way to expand more freedom and autonomy in the market by relieving regulatory burden can be a key pro-growth and pro-employment strategy to cope with economic slowdown.

Key words: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Economic growth, Employment, Pan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지 정 토 론

주 제: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토론문

논평자: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논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개년도의 규제수준(전체규제 수준과 노동규제 수준으로 구분)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 규제수준이 낮아질 경우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규제수준과 노동규제 수준이 낮아질 경우 전반적인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노동규제의 완화 효과는 전체규제 수준의 완화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결과는 이들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규제 등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을 교정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이 증대할 수 있는 반면, 정부의 과잉개입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설정에 의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간의 적절한 역할 수준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도 다양한 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는 개념적 모형 및 분석방법론 상 아래의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개념적 모형의 구성이 소수의 선행연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개념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전된 분석모형이 제시되면 좀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둘째로,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분석방법인 패널분석과 관련된 논점이 있다. 패널분석은 횡단면(cross-section)적 차이와 종단면(time series)적 변동을 통합하여 연구현상을 일반화(generalization)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의 집성으로 인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은 계량분석의 본질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 사용된 인구나 무역개방도 등 몇몇 변수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2008년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상황 기간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이 패널자료에 혼재되어 왜곡된 분석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패널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합동 횡단면(repeated cross-section) 분석으로 연구결과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널분석은 강력한 분석도구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횡단면적·종단면적 자료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적 자료는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으나, 종단면적 시계열 자료는 상대적으로 자료의 취득이 어렵다. 이 연구의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는 규제수준의 측정은 프레이저 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규제수준을 측정할 최적의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OECD에서 측정하고 있는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 등 보다 정교한 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수는 매년 측정되지 않아 시계열분석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이 패널분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규제수준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